



주간 통일정세

2013-2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南과 '불과 350m 거리' 최전방 초소 방문(6/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원도 중부 최전방에 있는 오성산과 까칠봉을 찾아 남쪽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전방지휘소에도 들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2일 '오성산을 지키고 있는 초소들과 이 초소들을 관할하는 제507군부대를 시찰했다며 그가 가파른 산의 정점에 올라 "최전연(최전선)의 높고 낮은 산발들을 부감하면서 군부대의 방어전연에 대처하고 있는 적진과 적정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지형지물들을 상세히 요해(파악)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노작' 뒤늦게 소개... "제품 질 높여라"(6/4, 연합뉴스; 천리마)**
 - 북한의 월간 대중잡지 '천리마' 5월호는 '질 제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는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작년 12월 15일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일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노작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입수보도함.
 - 잡지는 "(김 제1위원장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주셨다"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먼저 규격화 사업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며 국제적 규격을 적시에 파악하고 새로운 규격을 국가적으로 통일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강원도 과수농장 현지지도(6/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확장공사를 한 강원도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과수농장 확장공사를 맡은 '618건설돌격대'의 성과를 보고받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집행 결과를 파악했다고 통신이 전했으며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 최휘 노동당 제1부부장, 박태성 당 부부장, 박정천 군 상장, 안지용 군 중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마식령 스키장 올해 완공하자" 독려(6/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체 주민과 군인에게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올해 안으로 끝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4일 '마식령 속도를 창조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카자란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마식령 스키장 건설은 주민들에게 더 훌륭한 문화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려고 노동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라고 밝히면서 스키장 건설이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대공사이지만 올해 안으로 세계적인 스키장을 건설하자는 노동당의 결심에는 "추호의 드팀(빈틈)도 없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버섯공장 현지지도(6/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지어진 보성버섯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공장을 둘러보며 버섯 균 생산, 재배, 원료 물질을 준비·가공하는 기질 생산 등의 공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으며 김정옥, 최휘 당 제1부부장과 박태성, 황병서 당 부부장 등이 동행함.

● 北 소년단 제7차 대회 개최...김정은 참석(6/6, 조선중앙방송)

- 북한 소년단 제7차 대회가 창립 67주년인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소년단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위해 항상 준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시켜야 한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있어 소년단원들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강조했으며 소년단 규약 개정 문제와 소년단원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충성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서,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맹세문을 채택함.

● 北 김영남, 마식령 스키장 건설현장 시찰(6/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7일 강원도의 마식령 스키장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마식령 스키장은 조선노동당이 매우 중시하는 건설 대상"이라며 "스키장 건설을 올해 안으로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독려했으며 또한 "마식령 지구에 세계 일류급 스키장을 건설해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드팀없는(흔들림 없는) 의지"라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6/3, 김정은 黨 제1비서, 6.2 오성산 초소들과 제507군부대 시찰(6.3, 중통·중방·평방)
 - 김격식(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박정천(육군상장), 안지용(육군중장), 최휘(黨 제1부부장), 박태성(黨 부부장) 동행
- 6/3,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49군부대 돼지공장 현지지도(6.3, 중통·중방·평방)
 - 박정천(육군상장), 안지용(육군중장), 최휘(黨 제1부부장), 박태성(黨 부부장) 동행
- 6/4, 김정은 黨 제1비서,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6.4, 중통·중방)
 - 김격식, 최휘, 박태성, 박정천, 안지용 동행
- 6/4,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각지 소년단 야영소들에 악기-문화용품 전달 및 '김정은 선물' 전달모임, 6.3-4 각각 진행(6.4, 중통·중방)
- 6/5, 김정은 黨 제1비서, 6.4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올해 마식령스키장건설 완공' 독려 '호소문' 발표(6.5, 중통·중방·평방)
- 6/5,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보성버섯공장 현지지도(6.5, 중통)
 - 김경옥·최휘(黨 제1부부장들), 박태성·황병서(黨 부부장들) 동행
- 6/6,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6.6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 참석 (6.6, 중방·중통)
 - 최룡해(총정치국장), 리영수(黨중앙위 부장), 김승두(교육위 위원장)동행
- 6/8,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지도(6.8, 중통·중·평방)
 - 최룡해·문경덕·백계룡·최휘·박태성·전창복 등 동행
- 6/9,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6.9, 중통·중방)
 - 선물 수여 모임, 6.9 전용남(「청맹」 위원장) 참가자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인민군대가 건설하고 있는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정형 및 사리원市 '미곡협동농장' 현지요해(6.6,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함흥지구 중요 공장·기업소 현지요해(6.9, 중통·중방)
 -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함흥모방직공장·함흥편직공장·흥남전극공장 현지요해



나. 경제

● 北 나선특구 세일즈... "황금의 삼각지대"(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세계적인 주목을 모으는 황금의 삼각지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여러 나라의 기업가들이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경영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곳에 커다란 호감을 갖고 투자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힘.
- 통신은 "나선경제무역지대는 러시아의 원동과 중국의 동북 지방, 몽골을 포괄하는 자원이 풍부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배후지로 하고 있다"며 "이 지역들에서 방대한 경제적 자원들이 개발·이용되는 경우 나선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이상적인 중계수송기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함.

● 北 경제개발구법 제정...경제특구 확대 추진(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에서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됐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5월 29일 발표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라면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국가는 투자자에게 토지 이용, 노력 채용, 세금 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설명함.

다. 군사

● 北 현영철 전 총참모장, 최전방 5군단장 전보 확인(6/3, 연합뉴스)

- 북한 현영철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강원도 중부전선을 방어하는 5군단 사령관으로 전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3일자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일 최전방 '오성산 초소'들을 시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은 관련 사진에 현 전 총참모장의 모습이 포착돼 확인됨.

● 北, 서해 항행금지구역 선포...해안포 훈련인 듯(6/8, 연합뉴스)

- 북한이 평안남북도 서한만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오늘부터 내주 초까지 서한만 해상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 같다"면서 "해당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군, '대화 국면' 무관하게 훈련 활발(6/9, 연합뉴스)

- 북한군이 최근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분위기와 무관하게 동·서해에서



활발한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군은 지난 6~7일 동해 원산 앞바다 해상에 항해금지구역 설정하고 신형 장비로 추정되는 화기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전함.

- 기타 (대내 군사)
 - '김정은 호소문' 과업관철 군인궐기모임, 6.5 최룡해·장정남 등 참가
 - 下 현지에서 진행(6.5,중통)

라. 사회·문화

- 북한서 '김정은 배지' 등장...체제 공고화 상징(6/3, 연합뉴스)
 -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상이 새겨진 배지가 지난달 부터 등장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배지는 아직 수도 평양의 일부 간부층을 중심으로 배포돼 북한 주민들이 널리 착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식통은 "김정은 배지를 단 사람도 이 배지만 다는 것은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 배지와 나란히 다는 경우가 많다"고 전함.
- 北 "황해북도서 구석기 동굴 유적 발굴"(6/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종합대학 인류진화발전사연구집단이 최근 황해북도 승호군 금옥리에서 구석기시대 동굴 유적을 발굴·고증했다고 4일 보도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中 "탈북 청소년 사건, 송환협력 요청 못 받아"(6/3, 연합뉴스)
 - 탈북 청소년 강제 복송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송환 협력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중국 여행사들 "북한 관광 재개됐지만 반응 시들"(6/3, 중국신문사)
 - 중국인의 북한 육로 단체관광이 최근 재개됐지만 예년과 달리 관광객이 적어 랴오닝성 단둥(丹東) 등 변경지역 여행사들이 모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국신문사가 3일 전함.
 - 단둥 최대 여행사인 단둥중국국제여행사 관계자는 "긴장된 한반도 정세



뿐만 아니라 북한 관광을 떠나려는 관광객이 적어 북한 관광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년에는 6월이 북한 관광 성수기였는데 올해는 언제쯤 정상화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함.

● **北, 군 간부 보내 시리아 정부군 지원(6/3, 아사르크 알아우사트)**

- 북한이 내전 중인 시리아에 군 간부들을 파견해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일간지 아사르크 알아우사트가 3일 보도함.
- 인권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의 라미 압텔라흐만 대표는 이 신문에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 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11~15명이 정부군을 돕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군 장교들은 알레포 남동쪽 군수공장과 시내 정부군 기지 등 여러 곳에 배치됐다. 북한군 장교들은 직접 전투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병참 지원이나 작전 계획에 관여하고 있으며 정부군의 포격을 감독하기도 한다"고 전함.

● **北 경작지 비율, 세계 평균보다 4%p 높아(6/4, 연합뉴스)**

-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에서 북한 농업 전문가로 활동해온 톰 모리슨 씨는 지난 3일 북한 전문 블로그인 '사이노 엔케이'(SINO-NK)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경작이 가능한 땅은 전체 면적의 15%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중국과 미얀마와 같은 수준"이라며 "이는 전세계 국가의 평균 10.6%보다 높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그는 식량 수출국인 호주는 경작지 비율이 6%이고 식량안보를 달성한 인도네시아도 11% 수준이라며 "북한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경작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 **북·중 신압록강대교 주탑 완공...내년 7월 개통(6/4, 중국신문사)**

-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현수교인 신압록강대교의 주탑이 최근 완공됐다고 중국신문사가 4일 전함.

● **라오스 "청소년 '정치적 망명' 인정못해"(6/4, 연합뉴스)**

- 라오스 정부는 최근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논란과 관련,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탈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배경을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호영 세인 라오스 외교부 공보담당 부국장은 4일 인터뷰에서 한국인 2명이 "나이 어린 학생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왔다고 밝히면서 탈북 청소년들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향력 행사와 북한과의 특수관계 등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함.

● **주북 中대사 "북중, 새로운 역사적 단계 들어서"(6/4, 조선중앙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현시기 중조(북중) 두 나라 관



계는 새로운 역사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류 대사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방중 30주년에 즈음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고려호텔에서 개최한 연회에서 "(양국관계는) 호상 존중, 호혜공영의 원칙에서 공동으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北 "日の 위안부 망언은 양심에 도전하는 야만행위"(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관련 망언 등을 거론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일본) 우익세력의 책동은 일본의 전도를 해치는 자멸 행위"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인류 양심에 도전하는 야만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성노예 문제에 대한 태도는 일본이 지난 세기 인류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배상과 직결돼 있는 초미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주장함.
- **北 아동 3명 중 1명은 발육부진(6/6, 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13 식량·농업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의 발육부진 비율은 32.4%에 달한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평균치인 26.8%보다 높은 수치로, 필리핀(32.3%), 미얀마(35.1%), 인도네시아(35.6%) 등과 비슷했으며, 특히 중국(9.4%)의 3배를 넘음.
- **일본정부 "남북대화 움직임은 좋은 일"(6/6,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한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양측 사이에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대립 상태보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스위스, 스키장 설비 대북 반출 반대(6/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스위스 업체들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스위스 연방정부가 대북 물자 반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스위스 연방경제부 관계자는 자국 기업이 스키장 건설 장비와 시설을 북한에 수출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수출 관련 문의를 해온 기업들에 제재대상인 북한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함.
- **중국 훈춘~북한 원정리 새 교량 건설 준비 막바지(6/7, 연변일보)**
 - 중국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지린성 훈춘(琿春)시 취안허(圈



河)통상구와 북한 나선시 원정리를 연결하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의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오는 10일 마무리된다고 연변일보가 7일 보도함.

- 신문은 지난달 12일 새 교량 건설과 관련된 현지 답사와 환경평가가 이뤄졌으며 지질답사보고가 완료됐다고 전했으며 수도확보보고, 홍수막이논증보고, 토지심사의견, 지질재해평가보고 등의 절차가 오는 10일 끝난다고 덧붙였다.

● WFP, 北 주민 240만 명 식량지원계획 승인(6/8,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다음 달부터 1년간 북한 주민 240만 명에 식량을 지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WFP는 이번 주 이탈리아 로마 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함.
- 프랜시스 케네디 WFP 본부 대변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사회가 승인한 신규 지원사업이 시작된다면서 "WFP는 내년 6월까지 북한 어린이와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 등 240만여 명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김정일의 첫 방중('83.6.1) 30돌 즈음 '보름간 2만5,000여리 방중 성과' 칭송 및 김정일의 중국 특사(최룡해) 파견은 "조중친선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北-中 친선 강화발전' 재차 강조(6.4, 중통·민주조선)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영변핵시설 1~2개월뒤 가동 가능(6/4, 연합뉴스)

- 북한이 이르면 1~2개월 후에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22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가 같은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은 최근 5MW급 가스흑연 원자로와 20~30MW급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ELWR)를 포함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MW급 원자로의 재가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원자로 2차 냉각을 위한 새로운 장치는 거의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함.



- **스웨덴 연구소 "북한 핵보유국으로 간주할 수 없어"(6/4,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함.
 - 스테파니 블랭크너 SIPRI 대변인은 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기폭장치 제작을 넘어 핵무기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췄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북한을 여전히 핵보유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SIPRI의 입장"이라고 설명함.

- **미·중 정상, 北 핵보유국 불인정·한반도비핵화 합의(종합3보)(6/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전날부터 이틀간 양국 간 정상회담이 열린 캘리포니아주(州) 랜초미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이번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 도널런 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의 '남북관계 국제화' 논리는 대결 책동"(6/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국제화'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 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개성공업지구는 '6.15'의 산아, '우리 민족끼리'의 상징"이라며 "외세에 의해 강토가 두동강나고 하나의 민족이 근 70년 세월 분열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것도 부족해 개성공업지구와 비무장지대에까지 외세를 끌어들여 하려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를 가로막고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힘.

- **北, 한미일 합동훈련은 "평화 위협 범죄행위" 비난(6/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위험한 3각 군사동맹 구축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설에



서 "얼마 전에 일본 규슈의 서쪽 해역에서 미일남조선 합동군사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진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 훈련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함.

- 또한 "미일남조선 합동군사훈련을 통한 3각 군사동맹 강화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며 침략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힘.

● 北, 청소년 탈북사건에 "유인납치행위" 비난(6/5, 연합뉴스)

- 북한이 5일 탈북 청소년 9명이 최근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에 대해 남한이 먼저 '유인납치'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우리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유인납치해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가려다 발각된 반인륜적 만행 사건이 드러났다"며 남한 당국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주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행을 추진한 사람을 '종교의 탈을 쓴 인신매매 거간꾼'이라고 주장한 뒤 "(이들이) 수십 명의 우리 청소년을 유괴납치해 비밀 은신처에 가둬놓고 온갖 악행을 감행했다"면서 성경과 찬송가를 외우게 하고 이를 못하면 몽둥이로 구타해 온몸에 멍이 들고 정신적 압박으로 말투까지 이질화됐다고 주장함.

● 北, 한미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비난... "군사적 도발"(6/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한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구실로 연합방위력 강화를 떠들며 현재의 연합군사령부와 맞먹는 새로운 연합전구사령부를 내올 기도를 드러낸 것은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다"며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비난함.

● 北,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포괄적 당국회담 제의(6/6,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조평통은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6·15 공동선언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 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며 "북과 남 민간단체들과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북한, 9일 개성서 남북 당국 실무접촉 제의(6/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우리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오는 9일 개성에서 당국 실무접촉을 먼저 갖자고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당국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즉시 받아들인 것을 평가한다"면서 "수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불신이 극도에 이른 현 조건을 고려해 남측이 제기한 장관급 회담에 앞서 그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접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함.

- **남북 '장관급회담 12일 서울 개최' 합의...문안 조율중(종합)(6/9, 연합뉴스)**
 - 남북 양측은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합의서 문안 조율작업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남북 양측이 다 12일 장관급 회담을 한다는 걸 기본 사안으로 깔고서 의제 설정 문제, 대표단의 규모나 체류일정, 경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일단 서로 합의서 문안을 주고받았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南 당국자들의 '남북관계 국제화(개성공단 국제화·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발언은 "북남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흡수통일을 위한 것"라고 비난 및 '우리민족끼리' 강조(6.4, 중통)
-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대담(6.7), 南 정부가 제의한 '남북 장관급회담(6.12, 서울)' 前 사전 '남북 당국 실무접촉(6.9, 개성)' 제의(6.7, 중통·중·평방)
 - 남측이 제기한 장관급회담에 앞서 그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접촉이 필요하다고 보며, 9일 개성에서 북남 당국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7일 14시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가동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남측의 대답을 보내기 바람.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조태용 한반도본부장 "北 마음 바뀌어야 회담 가능">(6/3, 연합뉴스)
 - 조태용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북한의 마음이 바뀌어야 비핵화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된 조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개발은) 전략적으로 북한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신하지만 이 확신을 북한에 납득시키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면서 "(북한의) 마음이 바뀌어야 회담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조 본부장은 "북한이 핵에 대해 헌법에 조항도 넣고 북한 지도자가 바뀐 뒤에는 비핵화란 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졌다"면서 "일하는 조건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북한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누구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북한 설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조 본부장은 "과거에는 6자가 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비핵화라는 똑같은 말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 그는 "어떤 회담을 다시 만들어 '꼭 해야 한다,' '회담에 꼭 가야 한다' 이런 것은 우선순위 밑으로 가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며 회담이 언제 열리는 지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런 언급은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언급하면서 6자회담 의사 등을 밝힌데 대한 한·미 양국의 신중한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화'언급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6자회담 즉각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북한, 핵시설 가동 준비중>(6/4, 월스트리트저널)
 -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빠르면 다음 달 핵 원자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음.
 -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으나 핵시설 재건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
 - 지난 4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두 가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음. 다른 한 가지는 경제 성장. 그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임을 천명했음.



- 위성사진은 북한 북부에 위치한 영변 핵시설을 5월 22일에 촬영한 것임. 사진에서는 새 냉각 장치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자로에서 배출한 사용후연료봉을 보관하는 데 쓰일 용수 공급 장치도 볼 수 있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는 분석했음.
- 원자로 건물 안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도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 이 보고서는 웹사이트 '38north.org'에서 최초로 공개됐음.
- 전문가들은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면 앞으로 1~2개월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 그러나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려면 새 연료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북한이 연료봉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음.
- 1980년대에 건설한 5MW 규모의 영변 원자로를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쓰일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원자로임.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조를 조건으로 한 핵무기 축소 협상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이 원자로 또한 재가동과 폐쇄를 반복했음.
- 2008년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위치한 18m 규모의 냉각탑을 철거했음. 그러나 올해 4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한 작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충분히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은 유일한 동맹국이자 후원자인 중국으로부터 6자 회담에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음. 6자 회담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에게 원조를 제공할 것을 협상하는 자리. 그러나 북한은 자국의 핵 야망을 두고 재협상을 벌일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릴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5~10개의 소형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전문가들은 노후한 원자로가 재가동된다 해도 추가적으로 폭탄을 생산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핵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핵시설에 위치한 우리늄 농축시설임. 이 시설은 2010년 처음 알려졌으며 핵무기에 쓰이는 핵분열 물질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이 우리늄 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2월 12일에 있었던 핵실험에서 우리늄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영변 우리늄 농축시설이 유일한 농축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다른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중국 "각 당사국, 6자회담 중시해야">(6/4,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북핵 6자회담 조기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우리는 각 당사국이 6자회담이라는 중요한



- 기제를 중요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6자회담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관련국 간 관계 증진의 중요한 틀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련 문제의 해결은 모든 이들의 바람이라면서 각 당사국들이 서로 관계를 개선하고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홍 대변인은 이어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은 반드시 접촉과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국의 이 같은 언급은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방중해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임.
- <정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6/5, 연합뉴스)
- 외교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 결의 2094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결의 채택 후 90일(6월 5일) 이내에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94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또 5·24 조치와 관련법에 따라 무기 및 의심물자 관련 금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2094호에 반영된 '캐치올(Catch-all)' 개념의 무기 및 의심 물자 규제와 관련, 대외무역법과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 승인 절차에 의거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해양경비법 등에 따라 금수품목 적재의심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검색 및 통과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 이밖에 정부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리 제재 대상 단체·개인에 대한 자금동결 조치)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 등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나. 미·북 관계

- <北, 한미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비난... "군사적 도발">(6/6, 연합뉴스)
- 북한은 6일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비난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한과 미국이) 전직작전통제권 전환을 구실로 연합방위력 강화를 떠들며 현재의 연합 군사령부와 맞먹는 새로운 연합전구사령부를 내올 기도를 드러낸 것은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미 군 당국이 최근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을 정면 비난한 것임.
 - 노동신문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지난 1일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방안이 논의됐다고 "조선 반도의 현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 언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음.
 - 그러면서 "우리는 반(反)공화국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무분별한 반공화국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와 긴장완화를 추동하는 긍정적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미국 "남북대화 환영...북미대화는 비핵화 전제">(6/7,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한국과 북한의 당국 간 대화 재개를 환영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북미 간 대화나 협상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와 관련한) 보도를 봤다. 한국과 북한이 개성공단 및 다른 이슈에 대한 대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또 "미국은 항상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해왔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도 북미 간 핵 협상 재개 등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음.
 - 사키 대변인은 "남북 대화와 관련한 얘기가 아직 오가는 상황인 만큼 앞서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일을 남북 간 문제이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이슈와 엮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이어 "미국과의 대화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이 취해야 할 여러 조치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2005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국제 의무 준수 등이 포함된다"며 "물론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항상 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남북이 합의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핵 6자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 약속이 전제돼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북핵 6자 회담에 회귀하기보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개별 당사국과의 사안별 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에도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드러냈음.
 -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동기까지 짐작할 수는 없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다. 그러나 알다시피 미국은 6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고 이들 당사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됐다고 해서 당장 이런 방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한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달 말 한국 방문을 돌연 취소하고 독일 베를린에서 북핵 6자 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 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키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
- 사키 대변인은 자신이 알기에는 이 보도는 '오보(false and incorrect)'라고 못박았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여행사들 "북한 관광 재개됐지만 반응 시들">(6/3, 연합뉴스)
 - 중국인의 북한 육로 단체관광이 최근 재개됐지만 예년과 달리 관광객이 적어 랴오닝성 단둥(丹東) 등 변경지역 여행사들이 모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3일 전했다.
 - 통신은 최근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재개한 단둥의 한 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1인당 요금이 750위안(14만원)인 신의주 1일 관광이 오는 6, 7, 9일에 떠날 관광단을 이미 모집했다고 보도했음.
 - 그러나 요금이 2천800위안(52만원)가량인 평양, 개성, 판문점, 묘향산 4일 관광코스는 아직 관광단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단둥 최대 여행사인 단둥중국국제여행사 관계자는 "긴장된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북한 관광을 떠나려는 관광객이 적어 북한 관광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년에는 6월이 북한 관광 성수기였는데 올해는 언제쯤 정상화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은 중국의 변경도시 가운데 평양, 개성 등 북한의 관광명소까지 이동 거리가 가장 짧아 현지 업체는 북한으로 가는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80%가량이 단둥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북·중 교류의 양대 축인 단둥과 지린성 연변(延邊)을 통해 육로로 북한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각각 연간 2만 명, 1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됨.
- <중국, 北특사 최룡해에 미지근한 수준 접대>(소식통)<(6/3, 연합뉴스)
 - 지난달 방중한 북한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 측에서 '미지근한(lukewarm)' 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 한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최 총정치국장이 이끄는 북한 특사단이 당시 중국 고위관계자들과 한 대담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 이 소식통은 최 총정치국장과 중국 측 사이의 면담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북한, 중국 양측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중국은 특사단에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촉구했으나 북한 측은



- 이 요청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기색이 거의 없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이 소식통은 "북한의 태도가 부드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has not mellowed)"고 말했다. 중국이 당시 면담에서 북한에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면 어떤 조치를 할지를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최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서 지난달 말 사흘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을 만났음 그는 시 주석과의 면담에서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방중 기간에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키로 동의했는지를 묻자 북한으로선 "전적으로 그 필요성에 달려있다"고 답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납북 의심 해안 실종자 재조사 착수>(6/9, 미국의소리)
 - 일본 정부가 과거 발생한 해안 실종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음. 실종자들이 납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북한이 과거 일본 어선을 습격해 선원을 납치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상 규명에 나선 것임.
 -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해안 사고에 대해 납치 관련성이 있는지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 오타 국토교통상은 북한이 일본인 선원들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달 말 북한이 전담부대까지 편성해 한국과 일본 어민을 납치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전했다.
 - 이 탈북자는 자신이 북한 군 간부로 납치 작전에 가담했었다면서, 북한이 지난 1962년에서 85년까지 월산 부근에 약 120 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해서 한국과 일본 어민을 납치하는 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960년대부터 발생한 해안 사고에 대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음.
 - 한편, 지난 1962년에서 85년까지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해안 사고는 모두 6만 9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 러·북 관계

- <북한, 이번주 러시아에도 특사 파견...김격식 보낼 듯>(6/3, 경향신문)
 -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를 보낼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특사 파견은 이르면 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북·러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며 "특사에는 김격식 군 총참모장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특사단은 방중 특사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때와 마찬가지로 6~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군부 강경파로 알려진 김격식 총참모장은 2007년 4월 총참모장에 오른 뒤 4군단장으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11월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최근 총참모장에 재기용됐음.
- 북한 특사는 지난 몇 달간 고조된 한반도 긴장에 대해 자국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화국면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
- 최룡해 특사가 중국 방문 때 밝힌 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비핵화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음. 또 김정은 제1비서의 러시아 방문 의사도 타진할 것으로 보임.
- 오는 12일이 러시아 공화국 주권선언일(러시아로 국명이 바뀐 날)이어서 축하사절도 겸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 특사를 보낼 것은 예상된 일이지만 그 시점을 미·중 정상회담 즈음에 잡았다는 점이 주목됨. 대화국면이 시작될 것에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를 한·미·일에서 떼어놓으려는 시도로 해석됨.
- 러시아는 중국보다 좀 더 비핵화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음.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이 군비를 증강하는 것에도 반대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린치핀, 원자력 반영기대" vs "기술·경제해법 찾자">(6/3,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3일 서울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에 착수했음.
 - 이번 협상은 지난 4월 양국이 현행 협정 시한을 2년 뒤인 2016년으로 연장하고 6월부터 협상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린 것임.
 -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날 시작된 협상에는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새롭게 교체된 미국측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음.
 -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양측 견해차가 현격한 만큼 '2라운드' 협상이 지난 30개월의 협상 과정 이상으로 힘들 것이라는 관측임.
 - 우리 정부는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주창하지만 미국은 핵 비확산 정책에 따라 농축과 재처리 모두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박 대사는 이날 협상 모두 발언에서 "한미 관계는 곧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으로 묘사된다"며 "이러한 린치핀 역할이 우리 협상 개정에도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에 미국측 컨트리맨 차관보는 "한미관계는 광범위하고 깊고 항상 성공적이었다"며 "이러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원자력협정)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강조한대로 △핵폐기물 처리, △원전 원료(우라늄)의 안정적 확보, △우리 원전 수출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의 부문에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을 마련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임.

● <한미 원자력협상 2라운드도 난항...9월 다시 협상>(6/4,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한 이후 첫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했으나 재처리와 농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 없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양국은 4일 서울에서 박노벽 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와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했음.
-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안정적 원전연료 공급 △원전 수출경쟁력 분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음.
- 이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국이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음.
- 논의 포인트는 협정 개정 이후에 나올 건식 재처리 연구 결과를 경제성, 핵비확산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기준을 답는 방안임.
-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 우리 측이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기존 플렉스(습식 재처리)에 비해 핵무기의 재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파이로프로세싱을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로 부르고 있지만 미측은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문제에는 적극 협력키로 했음. 우리는 2050년, 미측은 2048년 영구처분장 건설을 예상하는 등 양측의 일정이 비슷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여지가 큰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음.
- 안정적인 원전 연료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생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입장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재처리보다 기술적으로 더 용이한 농축 문제에 대해 미국은 핵 비확산 차원에서 더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밖에 원전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미 양국



의 이익에 최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협상에서 결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음.

- 한미 양국은 9월 미국서 차기 본 협상을 개최할 예정. 정부는 본 협상 전에도 수석대표 간 협의 및 실무 접촉 등을 통해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임.

나. 한·중 관계

● <정부 "27일밤 中에 탈북자 복송방지 요청">(6/3, 연합뉴스)

- 정부는 라오스에서 추방돼 중국을 거쳐 복송된 탈북 청소년 9명과 관련,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중국에 복송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추방된 사실을 파악한 직후부터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탈북 청소년 문제에 대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다른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발생한 직후 중국 외교부에 탈북 청소년 위치를 확인해주고 강제 복송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외교부는 탈북 청소년이 라오스에서 추방된 지난달 27일 저녁부터 서울과 베이징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에서는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송환 협력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국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음.
-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중국 영사국 담당 부과장에게 확인 결과 중국측이 관련국으로부터 송환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라오스와 북한 정부로부터 9명의 송환 관련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한·중 전략대화...탈북자 문제·한반도 정세 협의>(6/3,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외교 당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차관급 전략대화를 3일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임.
-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마주앉는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최근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복송된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임.
- 정부 관계자는 "양국관계의 큰 틀을 짜는 자리이지만 양국간 주요 현안 중 관심 사안도 항상 준비한다"며 "탈북자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도 주요 의제 중 하나임.



- 또 김정은의 특사로 최룡해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협의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자 관계와 공통으로 관심을 둔 국제·지역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 차관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핵심 당국자인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 연락부장 등도 만날 예정이다.
 -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2008년 시작됐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임.
 - 한편, 이날 베이징에서는 양국의 외교·안보 국제문제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CIIS)가 주최하는 학술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 <한중, 한반도 대화 재개 방안 놓고 '온도차'>(6/3, 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이후 처음 이뤄진 한중 고위 외교 당국자 간 협의에서 양국이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정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다소간 온도 차를 보였음.
 - 김구현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張業蓊) 중국 외교부 상무(수석)부부장은 3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제6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했음.
 - 이날 전략대화에서는 한반도 정세 문제가 주된 의제로 다뤄졌음.
 - 중국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계기로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우리 측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음.
 - 양국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고수에는 강력한 공감대를 재확인 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런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대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올해 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 열린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앞으로 양국 관계의 큰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
 - 김 차관과 장 부부장은 양국 최고 지도자가 수교 20주년 이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까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온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달 하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동의했음.
 -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한반도 정세 외에도 한중 FTA 추진, 해상 경계 획정, 역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 <한·중 군사회담 中서 개최…'핫라인 설치' 논의>(6/4, 연합뉴스)
 - 정승조 합참의장이 중국군 총참모부 공식 초청으로 4일 중국을 방문했음.
 -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중국 국방부와 총참모부가 함께 쓰는 '8·1청사'에서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과 한·중 군사회담을 개최함.
 -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중 군사교류협력 증진방안, 한국 합참-중국 총참모부간 소장급회의 정례화, 합참의장-총참모장간 핫라인 설치, 합참의장-총참모장간 정례 전화 공조회의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측은 북한의 최근 동향과 전망,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설명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간 군사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중국에 적극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음.
 -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고위급 인사의 정기적인 교류와 아덴만 해상 등 외국파병 부대간 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됨. 중국은 아덴만 해역에 7천500t급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을 파견해 놓고 있음.
 - 합참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해 군사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되도록 양국군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양측은 군사회담이 끝난 뒤 결과를 담은 보도문을 각자 발표할 예정. 이번 회담은 한국 합참의장이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개최. 정 의장은 군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우리 C-130 수송기를 타고 중국을 찾았음.
 - 중국군 총참모장은 지난 2009년 이후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음. 정 의장을 비롯한 우리 합참 군사대표단은 5일에는 중국 측이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칭다오(靑島)로 이동, 북해함대를 방문. 북해함대에는 지난 2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배치돼 있음.
 - 정 의장은 북해함대 방문 전 중국 중앙군사위 판창룡(范長龍) 부주석을 면담할 예정임. 그는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면담했음.

- <한·중, 군사분야 '전략적 협력' 확대 합의>(6/4,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군사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 정승조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은 4일 오후 베이징 '8·1청사'에서 한·중 군사회담을 하고 양국의 군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음.
 - 이번 회담은 한국 합참의장이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이뤄졌음.



- 합참은 회담 후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양국 대표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군사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양국은 지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후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음.
- 정 의장과 팡 총참모장은 전략적 협력 확대의 첫 번째 조치로 군 수뇌부끼리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로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신설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북한 도발 등 유사시 양국 군사당국간 즉각 협의체제가 중국 과도 마련되게 됐음.
- 양국은 이미 군 당국 간에 2회선이 연결된 전화를 이용할지, 국방장관 간 또는 합참의장과 총참모장간 '핫라인'을 별도로 개설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음.
- 중국은 우리 국방부와 지난 2007년부터 국방장관 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 합참의장과 중국 총참모장간 핫라인은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와 연계해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한국군과 중국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테러 및 화력시범 훈련 등을 상호 참관하는 방안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음.
- 우리 측은 지난 2009년 중국군이 참관할 수 있는 훈련 리스트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은 2007년과 2011년 인도적인 수색·구조훈련을 진행한 바 있음.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이후 중단된 합참과 총참모부간 소장급회의(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해 아덴만 해역 등 파병부대간 공조와 유엔평화 유지활동(PKO) 등에 협력하기로 했음.
- 정 의장과 팡 총참모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군사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에 동의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 정 의장은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채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도발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중국은 현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측도 정 의장의 이런 의견 개진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정 의장을 비롯한 합참 군사대표단이 우리 군 C-130 수송기를 타고 방중하도록 동의하고 대표단이 5일 칭다오(靑島) 북해함대를 방문할 때는 중국군 전용기를 이용하도록 배려했음.
- 합참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 우리 대표단을 핑장히 배려했다"면서 "최근 소원해진 북·중 관계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중 軍수뇌부 "北 핵무장화 절대 반대">(6/5,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군 수뇌부가 북한의 '핵무장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군의 한 소식통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군사회담에 참석한 중국군 고위 인사를 포함한 여러 중국군 인사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장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우리 군도 군사회담 등에 참석한 중국군 고위 인사들에게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중국은 이에 공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중국을 방문 중인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8·1 청사'에서 판창룡(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 정 의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 판 부주석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 공감했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다.
 - 정 의장은 이날 1시간 15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참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군사부문에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맞는 활발한 인적 교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친서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전날 열린 한·중 군사회담에서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도 강한 어조로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 <朴대통령 방중 '北비핵화' 방침…한중FTA도 화두>(6/7,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박4일간 진행되는 중국 국빈방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던 입장에서 180도 선회해 지난 6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뒤 남북간 실무 접촉과 장관급 회담 개최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에 급속히 '해빙 기류'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이어서임.
 - 또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음.
 - 박 대통령은 북한의 속내야 어떻든 일단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로 한 만큼,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이란 병행노선은 병행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음.
-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 셈임. 박 대통령은 이 점에서 중국 역할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임.
- 박 대통령은 7일 전군 주요지휘관 초청 오찬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방문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진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정부는 희망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와 2천151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량을 기록한 최대 교역국임. 수출과 수입규모는 각각 1천343억 달러와 807억 달러에 이룸.
- 현재 양국은 한중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진행하는 단계. 다만 한중FTA의 방향이나 범위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의견차를 조금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중 FTA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방안,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과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日, 유엔서 "위안부 문제 이미 해결" 주장>(6/4, 연합뉴스)

- 일본이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음.
- 일본 정부 대표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일반 토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배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다른 양자조약 등으로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4일 전했다.
- 일본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1995년 설립된 '아시아 여성기금'에 최대한 협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우리 정부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해결되지도 않았다"면서 일본측에 우리 정부가 제안



- 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양자협약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음.
-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최근 '망언'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명했음.
 - 일본 대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게 일본이 과거 아시아 등 많은 국가의 국민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 "(과거사에 대한) 하시모토 시장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totally different) 것이다"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대표의 발언은 우리 정부 대표의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임.
 - 앞서 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일본 일부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와 여성의 존엄과 진실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했음.
- <일본언론 "한중정상회담, 일본경제 공조 강화할듯">(6/8,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 오는 2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 경제를 위한 한중 양국의 공조 강화를 전망했음.
 -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넷판은 7일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침을 보이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일본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적었음.
 -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도 "영토, 역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일치하는 양국이 한층 접근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음.
 - 이와 함께 교도통신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와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맞서는 협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통신은 이어 한국 정부가 27~28일 미국과 중국의 당국자 및 민간 외교 전문가를 초청, '전략대화'를 하기로 한 사실을 함께 소개하며 "한국이 외교 파트너로 일본을 배제하면서 중국에 접근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서 '일·미·한'의 틀을 '미·중·한'으로 바꾸려는 자세가 선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음.

라. 미·중 관계

- <중국, 난사군도 분쟁 미국 '無입장' 태도 비판>(6/3, 연합뉴스)
- 리자오싱(李肇星) 전 중국 외교부장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미국 당국의 태도에 대해 직설적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냈음.
 - 리 전 외교부장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참석,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을 청취한 직후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력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장관이 됐는지



- 모르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고 대만 연합보가 3일 전했다.
- 이 발언은 헤이글 장관이 주변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와 인근 해역의 주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임.
 - 리 전 외교부장은 미국이 난사군도와 인근 해역이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만 인식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좋게 해결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 그는 "난사군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들은 모른 척하고, 어떤 이들은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이 지역 섬과 암초들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는 명확하다"면서 "역사 문헌을 보더라도 중국이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고 관할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유럽권 국가들이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이 '참견쟁이'가 될 필요는 없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음.
- <중국 해군, 미국 EEZ 진입...해양전략 변화 주목>(6/4, 연합뉴스)
- 중국 해군이 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순시 활동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의 해양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측 대표가 중국 해군이 이미 미국의 EEZ 내에서 순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군 태평양군(PACOM) 사령관 역시 이런 사실을 확인했음. 라클리어 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진입한 미국의 EEZ가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그러나 하와이와 미국 서부 해안 일대 수역은 너무 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해군이 진입했다는 EEZ는 괌 부근일 것으로 추정됨.
 - 국제법상 EEZ는 일반적으로 외국 군함이 항해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중국은 미국 군함이 중국 EEZ를 지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음.
 - 중국의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미국 EEZ 진입에 대해 중국이 해양 문제에서 국제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 해양 전략과 발전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 그러나 이토 고 일본 메이지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EEZ를 '배타적 정치 지역과 영토'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는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음.
 -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 오키나와(沖縄) 근해에서 외국 잠수함을 탐지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 EEZ 진입에 잠수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 이토 교수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잠수함을 사용할 것으로 보면서 "심각한 대처 가능성"을 우려했음.
- <중국, 5년간 억류된 미국 국적 화교 출국 허용>(6/6, 연합뉴스)
- 중국이 오는 7~8일 열리는 벵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지난 5년 간 억류됐던 미국 국적 화교의 출국을 허용했음.
- 5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화교 후즈청(胡志成)이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그의 가족들이 밝혔음.
 - 후즈청은 중국 텐진(天津)에서 사업을 하다 지난 2008년 산업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1년 5개월 간 복역하고 나서도 경쟁사의 소송 제기로 기소 중지 상태에서 출국이 금지됐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후즈청이 고소사건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출국이 금지돼오다 최근 이런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그의 출국 허용을 확인했음.
 - 미국 국무부는 후즈청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은 것을 환영했다고 BBC는 전했다.
 -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인권단체 '대화기금회(對話基金會)' 강위안(康元) 회장은 "중국 당국의 후즈청 출국 허용 조치는 오바마-시진핑 회담에서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중국 인권 문제에서 자국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풀이했음.
 - 강 회장은 또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정상 회담에서 자국내 일부 인권 문제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 <G2 회담> 최대 의제 사이버 해킹...다른 현안 소외(6/8, 연합뉴스)
- 세계인의 관심 속에 7일(현지시간)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슈는 사이버 해킹 문제였음.
 - 두 사람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고, 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가장 큰 관심사로 제기됐음.
 - 공식 정상회담의 형식이 아니어서 무려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동'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같은 문제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낸 두 정상 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불신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미·중관계의 현 주소를 실감케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모든 국가가 똑같은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 동시에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안보나 지적 재산권과 같은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국제 경제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미국내에서는 중국이 조직적으로 미국의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요시설을 상대로 사이버 해킹을 자행하고 있다며 중국을 성토했는 여론이 높았음.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군당국을 의심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시 주석을 거세게 몰아세우지는 않았음. 그는 회담후 가진 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이슈에서 강력한 이해에



도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놀랄 만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이버 안보에 대한 규칙과 공동 접근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이 비교적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은 것은 미국내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돌았음. 특히, 회담 직전 영국 일간 가디언이 극비 문서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음.
- 중국을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성토했던 자신이 똑같은 일을 했다는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 미국 기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음.
-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문제가 된 국가안보국(NSA)을 통한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해명할 수 밖에 없었음. 그는 이 문제는 "아주 제한된 이슈"라며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중국의 입장을 장황하게 개진했음. 그는 "중국은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라고 항변. 그러면서 "새로운 과학기술은 양날의 검"이라며 "이는 발전을 이끌 수도 있지만 정부와 당국자들에게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 미·중 양국은 이번 회담 이후 사이버 해킹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무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음. 향후에도 사이버 해킹 문제로 양국은 갈등의 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
- 사이버 해킹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된 때문인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한 협의는 심도있게 진행되지 않았음. 오바마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문제를 '기후변화'와 함께 양국의 협력과제로 언급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음.
- 하지만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 뭔가 내용있는 '한반도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왔다는 점에서 8일 오전 진행될 2차 회동 결과가 주목됨.
-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회담이 끝나고 시 주석이 귀국 길에 오른 직후에 이번 회담의 성과를 정리하는 언론브리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진핑 '대국 외교' 화두 던져>(6/8, 연합뉴스)

- "오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주된 목적은 중미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 대좌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한 마디로 자신의 방미 취지를 요약하면서 '대국 외교'의 포부를 드러냈음.
- 시 주석은 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의 랜초미라지 회동에서 '새로운 대국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힘줘 말하면서 미국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음.



- 그는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착안, 새로운 사고를 창조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대국 관계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대국 관계란 기존의 강대국과 새로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전쟁과 같은 전면적 대립을 거치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됐던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두 주요 강대국이 협력의 주선율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영을 이뤄나가는 개념임.
- 이 개념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재임 시절인 2010년부터 중국이 미국과의 각종 고위급 접촉에서 본격적으로 주창하기 시작했음.
- 미·중 양국은 2011년 후 전 주석의 미국 국민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대국 관계 형성 원칙에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음.
- 중국은 이번 시 주석의 첫 방미를 통해 아직은 추상적인 수사 수준에 머무는 미국과의 새로운 대국 관계를 실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평가
- 새로운 대국 관계의 틀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G2(주요 2개국) 시대'의 진정한 경쟁자이자 동반자로 확실한 인정을 받겠다는 것임.
- 중국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대국 관계 형성의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자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여전히 강함.
- 중국이 새로운 대국 관계를 주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존하는 최대 강국인 미국과의 갈등과 충돌을 억제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 국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음.
-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의 압력에 대응해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이룰 최대한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이날 "드넓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대국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지적했음.
- 중국이 새로운 대국 관계를 주창하는 데에는 미국의 견제를 피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마련한다는 수동적 의미와 '대국'로 부상한 자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적극적 의미가 혼재한다는 지적도 나옴.
- '양대대국'의 개념을 들고 나선 것은 중국이 미국에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자국의 종합적인 국력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것임.
- 또한 실질적인 G2 국가로서 미국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데 참여하겠다는 대국 외교의 선언이기도 함.
- 중국은 미국에 새로운 대국 관계의 구체적 실천 지침으로 '서로 간의 평등한 대우,' '상호 존중,' '서로의 핵심 이익 존중' 등을 강조함.
-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덩샤오핑 이후 줄곧 유지해온 대외 정책 기조인 도광양희(韜光養晦·칼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 틀에서 이미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리기도 함.

- 중국은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5세대 지도부를 출범시킨 작년 11월 18차 당대회에서 이미 이 같은 '대국 외교' 전개에 서곡을 올렸음.
- 중국은 5세대 지도부가 이끌 향후 5년의 정책 기조를 담은 18차 당 대회 보고서에서 신흥 대국 관계의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했음.
- 아울러 중국은 이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는 규정을 처음 삽입, 실질적인 G2 국가로 부상한 자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대국 외교'에 본격적인 사동을 걸었다는 평가임.

● <미·중 정상, 北 핵보유국 불인정·한반도비핵화 합의>(6/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두 정상은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밝혔음.
- 도널런 보좌관은 "중국은 최근 몇 달간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지도부가 공개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시 주석이 어제 북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제고해나갈 핵심분야라는 데 동의했으며,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 도널런 보좌관은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국은 또 북한의 확산 능력을 중단시키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경제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이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quite a bit of alignment)'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가기로 절대적인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시 주석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양 국무위원은 전했다.
- 시 주석은 또 한반도 시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사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두 강대국이 이런 원칙에 다시 합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됨.
- 이른바 '5세대 10년'의 중국을 이끌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북·중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 또 조만간 열릴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도널드 보좌관은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북한과의 대화 또는 협상을 진행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선택은 북한에 있음도 분명히 했다"면서 "6자회담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는데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실제로 체감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진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과거행태에 대해 실망해왔다고 지적했음.
-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6자회담에서 채택한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도널드 보좌관은 이번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 미·일 관계

- <미국, '반값' 셰일가스로 아베노믹스 숨통 열어준다>(6/3, 연합뉴스)
 - 미국이 저렴한 셰일가스를 일본에 수출해줌에 따라 일본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액의 최대 10% 이상, 연간 9조원까지 절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 수입물가 상승과 무역적자 증가의 최대 요인이자 '아베노믹스의 아킬레스' 중 하나로 꼽히는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미국이 LNG 수출을 통해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임.
 - 3일 일본 에너지전문 연구기관인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에 따르면 저가의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대 연간 약 79억 달러(약 8조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이는 지난 1분기 LNG 수입규모의 약 43.4%, 무역적자의 약 28.5%에 해당
 - 야나기사와 아키라 IEEJ 선임이코노미스트는 값싼 미국산 LNG 도입을 지렛대로 다른 국가에서 도입하는 LNG 가격도 낮춰야 한다며 미국산 LNG 도입의 경제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LNG의 발전용 수요가 폭증, LNG 수입량이 25% 이상 늘었음.



-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의 수입량이 급증한데다 올해 들어 엔저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LNG 수입 가격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t당 약 816 달러(지난 4월 현재)로 2010년보다 약 50%가량 올랐음.
- 그 여파로 일본 수입물가는 지난 4월 4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치솟았고, 무역적자도 1분기 2조7천789억 엔으로 전년 동기보다 79.7%나 증가해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돼 왔음.
- 반면, 미국에서는 최근 막대한 양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LNG 가격이 일본 수입가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음.
- 이와 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 가격이 기존 수입가의 약 절반 수준인 t당 466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 미국 정부는 지난달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국가로는 처음으로 일본에 대해 LNG 수출을 허용했음.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간 셰일가스를 핵심 전략적 물자로 간주, FTA를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만 수출해왔음.
-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셰일가스 수출을 요청하는 등 미국산 셰일가스에서 활로를 찾으려 애썼고, 미국이 이에 화답한 것임.
- 미국은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와 지난 달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엔저 정책을 묵인한 데 이어 LNG 수출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지원하는 듯한 분위기임.
- 그러나 최근 미국 자동차업계 등에서 엔저 비판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정부도 엔저를 그저 용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LNG 수출이라는 카드를 통해 일본 아베노믹스를 적절히 지원하면서도 때로는 압박할 수 있게 됐음.

바. 중·일 관계

- <“중국, 센카쿠 사태 상정 미·일 군사훈련 중지요구”>(6/4, 연합뉴스)
 - 중국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관련 무력 분쟁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미국과 일본의 낙도 방어훈련에 대해 중국이 취소를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
 - 미·일 간의 이번 훈련이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릴 예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세기의 정상회담' 직후인 10일 같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 훈련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미·일 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음을 의식, 중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했음.
 - 양국은 결국 '훈련은 미·일 동맹에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훈련을 예



- 정대로 실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일본 측은 "특정한 제3국을 염두에 둔 훈련이 아니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음.
 - '돈 블릿츠(dawn blitz · 새벽의 기습)'로 명명된 이번 미·일 합동훈련은 10일부터 26일까지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임.
 - 양국이 명시적으로 목적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센카쿠 점령 상황에 대비한 공동대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으로 평가됨.
 - 이제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양국 간 낙도 방어훈련에는 육상 자위대만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육·해·공 자위대가 동시에 참가하는 등 훈련의 수위가 높아졌음.
 - 일본 측은 육상자위대 요원에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수송함 및 프리깃함, 항공자위대 소속 항공총대사령부 요원 등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노나가 히로무(野中廣務) 자민당 전 간사장은 3일 일본과 중국이 1972년 수교할 때 센카쿠 문제는 보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다나가 가쿠에이(田中角榮) 당시 일본 총리로부터 들었다고 소개했음.
 - 전직 의원단을 이끌고 방중한 노나가 전 간사장은 류윈산(劉云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배치되는 것임.
- <일본 문부과학상 "모든 교과서에 센카쿠 기술하겠다">(6/8, 연합뉴스)
- 일본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초·중·고교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 일본측의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을 신는 등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음.
 - 시모무라 장관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중국이나 대만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초·중·고교 사회 과목 교과서에 이 문제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 영토 교육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음.
 - 이는 일본이 향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적는 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그동안 독도와 쿠릴 4개 섬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러시아와 영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센카쿠열도는 영토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과서 편집의 기준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문제를 명기하지 않았음.
 - 최근 중·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고교 교과서에는 관련 기술이 늘었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 5곳 중 4곳은 센카쿠 문제를 적지 않은 상태임.
 - 시모무라 장관은 "여전히 (센카쿠 문제에 대한) 기술이 없는 교과서가 있다"고 문제시했고, 관련 기술을 담은 교과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중국이나 대만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 그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문제를 명기해 모든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주장을 상세하게 신겠다고 말했다.
- 시모무라 장관은 또 아베 총리가 밝힌 교과서 검정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자학적인 역사관에 근거한 역사 교육이 아니라 일본의 전통, 문화, 역사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과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 일·러 관계

● <일본-러시아, 20일 쿠릴열도 영유권 협상 재개>(6/5, 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협상이 오는 20일 러시아에서 재개된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마쓰야마 마사지(松山政司) 일본 외무성 부(副) 대신이 러시아를 방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협의함.
- 일본과 러시아는 지난 4월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양국 평화협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쿠릴 4개섬 문제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분쟁을 겪어왔음.
-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반면, 현재 쿠릴 4개섬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이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 1956년 10월 양측은 쿠릴 4개섬 중 '하보마이 열도와 시코탄섬을 평화 조약 체결후에 일본에 반환한다'는데 합의했지만 4개섬 일괄 반환을 주장한 고이즈미 총리 재임시절(2001~2006년)부터 양측 간의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음.

아. 기 타

● <일본, NSC 설치 법안 확정...가을에 국회 통과할듯>(6/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7일 내각회의에서 외교·안전보장 분야의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는 법안을 확정했음.
- 이날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만, 국회 일정상 가을 임시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전망
- 일본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기존의 안전보장회의를 강화한 것임.



- 안전보장회의에선 주로 국방 안건을 다뤘지만, 앞으로는 총리와 국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월 1~2차례 상설회의를 개최해 외교·국방 기본 방침을 심의할 예정.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보좌관도 둘 계획임.
- 정보 수집 기능을 한층 강화한 점도 특징. 내각관방 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을 설치함.
- 여기에 속한 직원 수십명은 각 부처간 정책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할 예정임. 각 부처에는 NSC 연락관을 배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각 부처는 연락관을 통해 외교안보 관련 정보를 NSC에 제공해야 함.
- 현재 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내각 정보조사실 등이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을 양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가안전보장국이나 내각 정보조사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차 내각 시절인 2007년에도 NSC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조기 퇴진하는 바람에 무산됐음.
- 지난해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알제리 일본인 인질 사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갈등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다시 추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삼았고, '일본판 NSC'라고 부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